

민주, 尹·安 단일화 견제...“與 지지층 역선택은 진실”

여론조사 尹후보 받기 어려워 단일화 감동없어 위력 반감 李 통합정부에 安후보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은

100% 안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윤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다. 윤 후보가 묘책을 찾지 않는다면 안 후보의 제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또 “안 후보가 제안한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면 우리 지지층은 안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러 역선택하려는 공작이나 작전을 펼 필요 없이 우리 지지층은 역선택하게 돼 있다. 역선택한다는 말은 진실”이라고도 했다. 여론조사 방식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지지층의 대대적 참여로 안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 의미로, 윤 후

보에게 안 후보가 제안한 방식을 받지말라고 사실상 압박한 것이다. 우 본부장은 “안 후보는 완주할 것이다. 애초에 단일화 게임을 할 거면 등록하기 전에 했을 것”이라며 “미리 윤 후보가 받기 어려운 방법을 제안해 놓고 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제안은 단일화의 압박과 핑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며 “홍정하려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얻자는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도 오래 끌어

봤자 지지율만 떨어지니까 이거(여론조사 방식) 아니면 그냥 완주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지지율) 격차가 4~5배 난다. 국민의힘에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단일화는 감동이 중요하다”며 “이런 식으로 흘러 단일화가 됐을 때 위력은 점점 반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면서도 안 후보를 겨냥한 직접적 공격은 아끼는 분위기다. 안 후보의 주된 지지층인 중도층 표심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윤건영 선대위 정부실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대선후보 등록 날은 잔칫날과 같은 날인데 안 후보는 이례적으로 그날 단일화 제안을 했다”며 “무엇을,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분명치 않다. 선거 공학적인 계산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의 리그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에 안 후보도 여전히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광의로 보면 그렇다. 정파를 떠나 좌우를 떠나 누구나 함께 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발표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대 대선 14명 출사표...기호 1번 李·2번 尹

재·보선 5곳도 후보 등록 완료

20대 대선에 1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이틀 차인 이날 노동당 이백운, 새누리당 옥은호,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등 3명이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등록 첫날인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오준호, 국가혁명당 허경영, 새로운불결 김동연,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김재연,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등 11명이 등록을 마쳤다. 기호의 경우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의석 순으로 결정한다. 기호 1번은 이 후보, 2번은 윤 후보, 3번은 심 후보, 4번은 안 후보, 5번은 기본소득당 오 후보가 될 전망이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무소속 후보자는 없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5곳도 후보 등록이 완료됐다. 서울 종로는 국민의힘 최재형, 정의당 배복주, 서대전환 김도연 등 10명이, 서울 서초갑은 민주당 이정근,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등 5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구 중·남구에서는 민주당 백수범, 국민의당 권영현, 무소속 도태우, 무소속 주성영 후보 등 6명이 경쟁한다. 경기 안성에서는 국민의힘 김학용, 정의당 이주현 후보 등 3명이 출사표를 냈다. 충북 청주 상당은 국민의힘 정우택, 무소속 김시진 후보 등 4명이 맞붙는다. 민주당 종로, 안성, 청주 상당에,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구에 각각 후보를 내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단일화 소강 모드...투표 용지 인쇄전 전격 담판?

尹 “여론조사 고려 안해” 安 “더 알가알부 않겠다”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도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다. 양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급할 게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며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안 후보가 총리든 당 대표든 차기 대선 출마든 미래를 꿈꾼다면 윤 후보에게 양보하고 정치적 빛을 안기는 편이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가 먼저 스스로 사퇴하면 기꺼이 배려하겠다는 이른바 ‘선(先) 양보 후(後) 보

상론’이다. 임승호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경선 요구에 “윤 후보 지지율이 5배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존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하나도 안 거치고 한국시리즈 붙여달라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반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제안에 윤 후보가 답해야 한다”며 “경선 방식을 갖고 더 알가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 경선이 안 후보의 ‘마지막 제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이런 제안에 반응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안 후보가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두 후보가 유세 일정에 집중하는 가운데 참모들이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이어가며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타협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후보 선대본부의 김경진 공보특보단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에 역선택 방식 조항을 넣는 것을 수용하면 협상할 여지가 있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 오는 28일이 단일화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거론되는 만큼 그 직전에 후보 간 담판이 시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21일과 25일 법정 토론이 예정돼 있다”며 “안 후보가 토론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한 뒤 26~27일에 막판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지지율 추이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일을 넘어 사전 투표일(3월 4~5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3월 9일 투표하기 직전까지만 결론이 내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대선 여론조작·금품수수 등 철저 단속”

행안·법무·복지 장관 대국민 담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강조했다. 박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354명이며 이 중 329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같은 날 기준으로 470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81건

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을 실시해왔으며,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박 장관 등은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7시30분 투표소를 운영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에는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일회용장갑 착용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투표 당일 발열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지난 13일 기준 4천 418만5천79명이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25일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 부지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대지 15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 매매가-평당 1200만

소유자. 010-3605-5000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